

※ 아래 글을 읽고, 질문에 설명하세요.

---

위급상황에서 출동 경찰의 긴급출입을 가능하게 하는 112기본법이 66년 만에 제정된다. 경찰청은 '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'(112기본법)이 지난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112기본법은 사건 현장에서 출동 경찰의 권한을 명확히 명시했다. 112는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출동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다.

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112기본법에는 '긴급조치'의 범위를 확대했다. 112신고 사건이 '매우 급한 위해 발생 우려'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이 '일시사용·제한·처분'까지 가능하게 했다. 이를 거부·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기존에는 긴급조치가 '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'으로만 제한됐다. 또 천재·사변 등 위험한 사태 등 특정 목적을 전제로 '위해가 임박한 때'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. 긴급출입에 대한 좁은 해석 탓에 시민을 구출할 적기를 놓치는 일도 생겼다. 지난 2014년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친구 집을 두 차례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진입하지 못했다. '위해가 임박한 때'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. 실종 여성은 결국 다음 날 남자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

'피난명령권'도 새롭게 규정됐다. 출동 경찰이 재난·재해·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·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다. 이를 거부·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넣었다. 기존에는 천재를 포함한 위험한 사태에 한해 피난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제재 규정이 없었다.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 시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.

그 외 4000건의 거짓·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다. 현행법상 거짓·장난신고는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의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의 '거짓신고'를 통해 처벌해왔으나 두 규정 사이의 형량의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이 생긴 것이다.

---

1. 경찰관의 긴급조치란 어떤 의미인가? 구체적인 사례 1가지를 제시하시오.
2. 긴급피난권이란 무엇인가? 이는 경찰활동의 임무에서 위험 방지 차원이라고 여겨지는데, 경찰의 이런 권리는 112기본법에서 과거에 비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? 그리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인가?
3. 경찰의 임무에서 ‘긴급조치’가 112기본법이 제정됨으로써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인지 설명하시오.

- 제출기한 : 2025년 03월 26일(월요일) 18:30까지
- 제출방식 : 홈페이지 폴더(폴더명 “MT대체과제”). 이름과 학번 그리고 MT대체과물 (보고서 상단에 반드시 “이름-학번-MT대체과제” 명기)
- 작성분량 : 전체 A4 - 1매 이내 (글자 크기 11 포인트)